

새롭게 열리는 복지국가 기회의 내용을 위하여

남찬섭*

1. 정리

홍경준 교수가 말하는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는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을 잘 포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홍 교수에 따르면 고생산성부문과 저생산성부문, 그리고 국가부문 간의 관계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명분으로 하여 세 부문별로 상이한 보상 및 보호체계의 구축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이다. 이 체제에서는 ① 상이한 보상체계(계약적 지대 대 사후적 보상)와 ② 고용 및 보장에서의 이중적인 보호체계(기업복지, 가족임금, 지역별 사회보험 대 연복지·보조금·면세 등의 숨겨진 사회보장)가 작동하며 이러한 상이한 보상·보호체계는 다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결과한다. 이런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는 그에 고유한 ① 사회경제연합(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노동배제 등)과 ② 정치경제 제도(게임의 규칙-다양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들의 구조와 배열 등), 그리고 ③ 공공정책의 양상(정치적 목표·가치, 정책결정·실행과정 등)의 복합체로 구조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는 지구화, 탈산업화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적으로 위기에 처해 왔다. 저생산성부문으로부터의 자원추출과 고생산성부문의 계약적 지대 의존도 모두가 낮아짐에 따라 대외의존성과 시장자율성이 강조되고 생활보장의 불안정성 심화되고 생활보장에 대한 불안과 욕구가 민주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홍 교수는 그동안에도 위기에 대해 여러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발전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사회경제연합의 교체나 정치경제제도의 수정, 공공정책양상의 변화가 부족하여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로 정치경제제도의 수정 및 사회경제연합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정치제도 개혁에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주로 비례대표

* 동아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 csnam@dau.ac.kr

제 도입이나 연립정부체제로의 개혁과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재정지출 구조 개혁인데, 여기서는 그간 학계에서 별로 주목한 바가 없었던 “숨겨진 사회보장”의 개혁을 농업 직불금 제도의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비공식취업의 축소인데 이것은 홍 교수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규범적 기초와 현실적 기초로서 한국의 국가는 그 스스로가 노동자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인정투쟁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세 가지 개혁과제는, 비록 인정투쟁을 시민이나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에 적용한 예는 상당히 독특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또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지점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그간 그리 주목받지 못했던 국회선진화법의 개혁을 촉구한 것이나 흔히 경제사업으로 분류되는 농업직불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상기시킨 것 그리고 노동시장붕괴와 관련하여 비공식취업의 축소를 주장한 것은 학계에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제안과 함께 혹은 이러한 제안과 다소 맥락을 달리 하면서 홍 교수는 현 단계 한국 복지국가의 개혁과 관련하여 많이 추구되고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즉 프로그램우선주의와 국가우선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먼저 홍 교수가 말하는 프로그램우선주의는 서구 선진국들이 먼저 도입한 제도들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도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선행한 국가들이 내놓은 답을 우리에게 맞게 변형시켜 도입하는 것이 과제였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런데 홍 교수에 따르면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못지않게 많은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복지국가인가라는 질문에는 회의적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도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모방할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우리 스스로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형 사회복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홍 교수가 국가우선주의라고 부르는 경향과 관련하여 던지는 문제제기는 한국의 현실에서 국가의 확대가 과연 사회복지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국가는 중앙집권적 전통에 기초하여 강력한 국가주의적 통치방식을 구현해 왔다. 이런 점에서 만일 우리가 사회복지의 핵심가치를 공공성(publicness)이라 한다면, 한국에서 국가 역할의 확대가 반드시 공공성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공공성이란 어떤 특정 주체(예컨대, 국가)와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규범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국가나 민간이나 공히 공공성의 가치와 규범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2. 비판

홍 교수의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 및 그것의 전환을 위한 개혁과제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몇 가지 외에 크게 이견이 없지만 홍 교수가 문제제기한 두 가지, 즉 프로그램우선주의와 국가우선주의와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먼저 프로그램우선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면, 홍 교수의 주장은 결국 우리 사정에 맞는 제도를 우리

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홍 교수가 말하는 프로그램우선주의는 그런 표현보다는 '자생적 발전 경로의 개척' 정도의 표현이 좀 더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프로그램우선주의가 모방발전 혹은 추격발전 시대의 산물인 것은 맞지만 그런 프로그램우선주의가 단순히 선진국의 프로그램을 모방·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프로그램의 모방 혹은 그에 대응되는 현상으로 프로그램의 확산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또 프로그램은 추상수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다. 즉, 추상수준을 높여 예컨대 사회보험 정도로 비교적 높은 추상수준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도 4대 사회보험 혹은 5대 사회보험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구 선진국 못지않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추상수준을 낮춰서 구체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면, 예컨대 사회보험기여금 분담비율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서구 선진국과 다른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모방이 우리 실정과 우리의 목적에 대한 진지한 성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사회경제연합의 형성이나 정치경제체제의 구축, 공공정책적 가치의 정립 등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국가우선주의에 관해 생각해보자. 홍 교수는 국가우선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를 주로 공공성 개념에 기대어 하였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공공성을 특정 주체와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규범과 가치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이 보다 공공성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교수가 말하는 대로 공공성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공공성은 홍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가치와 규범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와 달리 어떤 사회질서가 갖는 어떤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는 공공성을 형식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것인데, 이 경우 공공성은 '무언가를 공적인 것으로 만드는 어떤 질서, 관계, 배열'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다수에 관계되는 질서·관계·배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조대엽, 2012; 남찬섭·이명진, 2013; Newman and Clarke 2009).

이 질서·관계·배열의 속성을 특정의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수에 관계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즉, 다수에 관계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참여나 관여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 관계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공성, 즉 공적질서·공적관계·공적배열 그 자체로서의 공공성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공공성이 주목받은 데에는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의 행태가 기여한 바 큰데 보수정권의 여러 행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아닌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주로 관계된 정책을 다수의 참여나 관여, 문제제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를 다소 무비판적으로 공공성의 주체로 간주해온 그간의 사회복지학계나 행정학계의 경향은 분명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수의 참여와 관여를 보장하고 다수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다수에게 공개되는 공적질서·공적관계·공적배열을 사회복지 부문에서 구

축하는 한 가지 유력한 방법은, 사회복지공급자를 국가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은 보육이나 노인요양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에서 민간공급자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흔히 민간부문의 존재이유로 국가부문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을 들지만 한국은 이를 거꾸로 적용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감시·비판기능을 위해 국가부문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정도이다.

3. 새로운 기회

이 글을 쓰는 현재 한국사회에는 새롭게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복지국가의 형성이 결국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때 한국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민국가의 형성이 분단·반공국가로 이루어졌고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발전국가가 더해져 분단·반공·발전국가로 국민국가 형성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사회에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사회경제연합과 정치경제제도, 공공정책의 양상 전반을 지배해 왔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인간본성에 관한 진단과 사회본질에 관한 진단, 그리고 실천전략을 가진 실천적 세계관인데(Heywood 2007), 이런 점에서 분단·반공이념은 사실상 이데올로기가 아니며 따라서 세계관이라 하기 어렵다. 인간본성이나 사회본질에 관한 진단이 항상 부정적·반영적일 수밖에 없고 타(他)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아(我)가 존재하는 지극히 타율적이고 의존적인 사고방식인 것이다. 그리하여 분단·반공이데올로기는 한국의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왜 무엇을 하기 위해 모여 사는가’ 등 존재론적 질문과 정치적 질문의 제기를 차단하거나 특정 방향으로만 그런 질문을 하게 하고 답도 특정한 답만 하게 하여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막아왔다(김동춘 1997 참조).

그나마 긍정성을 가진 것으로 발전주의 이념을 들 수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발전주의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념이라고 주장하며 이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지극히 부정적·반영적이고 타율적·의존적이어서 홀로 설 수 없는 분단·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그리고 분단·반공이데올로기를 보완·실질화하기 위해(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작동되었다는 점이 독특한 점이다. 그리하여 한국의 발전주의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봉쇄당한 사회구성원들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관한 성찰 없이 서구만 따라가는 추격발전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는 한국이 일상생활에서나 정치관행 면에서 대단히 군사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편의주의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지극히 시장적·경쟁적 행태를 보이는 한 중요한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자생적·자율적·긍정적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가 분단·반공·발전국가의 대안패러다임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대단히 시장적·경쟁적인 것으로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발전주의의 프레임 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지구화·탈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적절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치 못해왔다. 또한 민주화와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복지국가가 부상하여 특히 지난 2010년대 초에는 한국현대

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복지국가논쟁이 전개된 바 있기도 했지만 그 복지국가논쟁은 또 다시 보수정권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보수정권은 다양한 부문에서의 공공성 훼손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정농단사태로 실패하였고 이로써 분단·반공이데올로기를 대변하던 세력이 급속히 몰락하고 이와 함께 보수세력이 반공보수와 시장보수로 분열되었다. 이는 한국현대사에서 지극히 보기 어려운 상황전개이다. 물론 분단·반공 세력은 아직 국회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이어서 간단히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쉽게 약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시장보수가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도 분석이 필요하며 계속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분열은 한국의 국가형성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의 복지국가의 구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보수세력의 분열은 그 자체가 사회경제연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분단·반공이데올로기의 약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제 이 글을 쓰는 현재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하여 적어도 정치부문 내에서는 사회경제연합(행위자들 간 역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선거과정에서도 분단·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분단·반공이데올로기의 약화는 특히 그것이 부정적·반영적·타율적·의존적 사고방식의 약화를 의미하고 따라서 그로 인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정체성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보다 폭넓고 자유롭게 추구할 여지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게임의 규칙, 즉 정치경제제도의 개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며 또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본다면 공공정책의 양상, 즉 복지국가의 목적이나 복지국가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기회의 내용을 위하여

그러면 새롭게 열린 기회의 창을 통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인가? 홍 교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연합(행위자간 관계)의 개혁과 정치경제제도(게임의 규칙)의 개혁, 그리고 공공정책 양상(목표와 가치, 정책적 고려사항들)의 갱신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공공정책, 즉 복지국가정책에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는 복지국가정책의 개혁이 사회경제연합과 정치경제제도의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복지국가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2010년대 초 복지국가논쟁의 함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10년대 초 복지국가논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복지국가라는 담론이 대안사회패러다임 자체를 대변한 최초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 그런데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은 한국사회에서 누구도 전형적인 복지제도라고 간주한 바가 없고 복지국가 건설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누구도 생각해온 바가 없었던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남찬섭, 2013; 윤홍식, 2011 참조). 한국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범사

회적 규모의 복지국가논쟁이 어떻게 전형적인 복지제도로 간주된 바도 없었고 복지국가건설의 핵심경로라고 간주된 적도 없었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전개되었는가 그 자체도 분석의 대상이지만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이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점도 중요한 논의거리라고 생각한다.

2010년대 복지국가논쟁의 의미는 그 논쟁의 주된 계기이자 동력이었던 무상급식논쟁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무상급식논쟁은 다음의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보편성(普遍性)이다. 무상급식논쟁은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구도로 전개되었고 결과적으로 보편주의 프레임이 무수한 이념공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이다. 둘째는 사회투자성(社會投資性)이다.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의 한 형태로 교육과 연관되며 또 교육과 그리고 더 일반화하여 말한다면 사회투자적 성격과 다소 간접적으로나마 연관되었기 때문에 것처럼 범사회적인 논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셋째는 지역성(地域性) 혹은 토착성(土着性)이다. 학교급식으로서의 무상급식은 해당 국가 그리고 좀 더 작게는 해당 지방의 토착 먹거리(local food)의 생산 및 유통과 연관되며 이런 점에서 국제식량자본의 전략 그리고 그에 편승한 FTA와도 연관 혹은 대응된다. 넷째는 친환경성(親環境性)이다. 토착 먹거리와 연관되는 것으로서의 학교급식은 친환경적 성격도 가진다. 그리고 이 친환경성은 지역성과 함께 지구화, 예컨대 FTA와도 연관 혹은 대응된다.

무상급식논쟁의 함의로 위에 논의한 것들 중 보편성과 사회투자성은 그것들을 복지정책과 연결시키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성은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지방분권, 즉 복지분권(분권지향성)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에서의 친환경성은 녹색주의나 그 연장선상으로 기본소득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한국에서 기본소득은 녹색주의의 영향보다는 청년문제나 양극화의 영향을 받은 바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급식에서의 지역성과 친환경성이 갖는 지구화 측면에서의 함의는 향후 복지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는 보편성과 사회투자성, 분권지향성(복지분권)을 둘러싼 찬반 대립 및 갈등을 주된 축으로 하여 전개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 보편성·사회투자성·분권지향성이 소수인종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가 향후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는 예컨대 보편성이 글자 그대로 실현되려면 소수문화에도 그것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사회투자성과 분권지향성도 소수문화를 배제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 전개를 큰 틀에서 규정지를 가장 중요한 맥락은 저출산·고령화라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와 연관된 하나의 담론으로서의 미래세대부담론과 국가채무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편성과 사회투자성은 크게 보아 계층문제(성별평등 문제)에 연관되고, 분권지향성은 중앙과 지방간 관계 문제에 연관되고 미래세대부담론과 국가채무론은 세대문제에 연관되고 소수인종문제는 문화간 관계 문제에 연관된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한국의 복지는 계층 간 관계 및 성별 관계에서 평등, 중앙·지방간 관계에서 균형, 세대 간 관계 및 문화 간 관계에서 연대라는 세 가지 지향성을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복지정책 평가에서 재원마련방안을 강조하는데 재원마련방안은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즉, 복지정책 하나하나에 대응한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

은 자칫 혜택을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beneficiary principle)을 유포하고 혜택의 증가를 지지하면서도 세금부담용의를 밝히지 않을 경우 이를 모두 이기적인 태도로 몰아붙임으로써 실제로는 사회경제연합의 개혁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간 복지혜택의 증가를 지지하면서도 세금부담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이기적이거나 모순된 태도로 해석해 왔는데 세금부담에 반대하는 태도는 부담능력의 결여나 조세신뢰감 결여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모순되거나 이기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태도라 할 여지도 있다(김수정·남찬섭 2015 참조). 수익자부담원칙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되고 이는 일반적인 조세원칙으로서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복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다. 재원마련방안보다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개혁을 의제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원마련방안의 지나친 강조는 조세개혁을 가로막을 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춘, 1997,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수정·남찬섭, 2015, “서민은 복지확대를 지지하는가?: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명제를 넘어서”, 『사회복지연구』 46(4), 351-374.
- 남찬섭·이명진, 2013, “공공성의 재구성과 생활공공성의 등장: 학교급식과 무상급식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36(2), 75-110.
-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 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복지학』 63(2), 57-79.
- 조대엽, 2012, “현대성의 전환과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재구성: 사회구성적 공공성의 논리와 미시공공성의 구조.” 『한국사회』 13(1), 3-62.
- Heywood, A., 2007, *Political Ideologies: An Introduction*. 4th ed. Palgrave Macmillan.
- Newman, J. and Clarke, J., 2009, *Publics, Politics & Power: Remaking the Public in Public Services*. Sage Publications.